

의안검토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명 :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년 6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5년 6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5. 5. 27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 5. 29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1994. 12. 23 정부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관광과 문화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제를 확정하여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국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실·국·본부중 교통관광국·건설주택국을 폐지하고, 문화관광국·건설교통국을 신설함.(안 제2조)

나. 내무국 사무중 건전생활, 문화·예술, 문화재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문화관광국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삭제함.(안 제5조)

다. 폐지되는 교통관광국 사무를 삭제하고, 신설되는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 문화재, 생활체육 건전생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안 제10조)

라. 도시계획국 사무중 도시정비·구획정리·도시재개발 사무를 신설되는 건설교통국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삭제함.(안 제11조)

마. 환경녹지국에 상·하수도 사무를 분장함.(안 제12조)

바. 폐지되는 건설주택국 사무를 삭제하고, 신설되는 건설교통국에 건설업·건설공사용자재·건설기계·도로·교량·하천·방재·주택·건축·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도시정비·도시재개발·교통·운수·차량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안 제13조)

사. 부칙 제2조에 타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와 대전광역시 도·소매업 진흥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상의 “건설주택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중 “교통관광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교통관광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함.(안 부칙 제2조)

3. 검토 의견

본 안건은 지난 '94년12월23일에 있었던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 시도의 행정조직 기능을 조정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체계를 연계하려는 것인데 지난 5월16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조정하려는 내용임.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명칭의 변경으로써 현행 교통관광국, 건설주택국을 폐지하고,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을 신설하는 것임.

둘째 국명칭변경에 따른 업무조정으로써 현행 내무국소관중 건설생활, 문화예술, 체육진흥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조정하고 폐지되는 교통관광국 사무중 교통·운수·차량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건설교통국으로, 관광사무는 문화관광국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도시계획국 소관중 도시정비, 도시재개발 분야를 신설되는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하고 상·하수도에 관한 사무는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임.

결과적으로 본안건은 정부의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체계를 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 하겠음.

개편된 정부조직을 보면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되어있고 도시, 도로, 주택, 교통에 관한 사무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되어있어 그 동안 중앙과 지방과의 업무추진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었다고 봄.

더욱이 업무기능상으로 볼 때 도로와 교통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도 그 동안 소관을 달리해왔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생산적이지 못했다고 봄.

따라서 금번 조정안은 이러한 상호 문제점을 보안하고 행정편의 보다는 업무의 기능이나 효율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뜻이 깊다고 보겠음.

의안검토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명 :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년 6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 학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5년 6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안건은 1995. 5. 27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 5. 29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1995. 7. 1부터 시장이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정무직 정원을 확보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월평정수장 제2단계 확장에 따라 증설된 정수시설 운영관리 인력과 수도시설 관리소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시험실 운영인력을 보강하고, '95. 5. 16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도 본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가.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본청은 813명에서 814명으로 하고, 사업소는 1,081명에서 1,10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 54명을 추가 규정함.(안 제2조)
- 나. 부칙 제2조에 타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함.(안 부칙 제2조)

3. 검토 의견

본안건은 금년 7월1일부터 시장이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정무직 정원을 신규로 확보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월평정수장 확장에 따라 그 관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지난 5월1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본청 정원으로써 오는 7월1일부터 시·도지사가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장요원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고

둘째 사업소의 정원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월평정수장 제 2단계 확장사업에 따라 정수관리인력 21명을 증원하고 수도시설 관리소의 불량계량기 유입방지를 위한 시험실 운영인력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셋째 의회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난 5월1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정원 54명을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등을 본 조례 부칙에 명시하여 삭제하려는 것임.

따라서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시본청은 813명에서 814명, 의회사무기구는 54명, 직속기관은 714명, 사업소는 1,081명에서 1,106명으로 조정되겠음.

다만 의회사무처 정수는 현재 본조례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의회의 별도 조례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는 총정원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아니었다고 봄.

따라서 본조례안 제2조 제2호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별도의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회사무처의 인력 운영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의 안 검 토 보 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년 6월 일

내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학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5년 6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5. 5. 27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 5. 29 당 위
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상수도사업본부의 월평정수장 제2단계 확장사업준공으로 업무량
과 인력이 증가되므로 월평정수사업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정수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월평정수사업소장의 직급을 지방기계사무관, 지방전기사무관 또
는 지방화공사무관에서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조정함.(안 제5조 제2항)

3. 검 토 의 견

본 안건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월평정수장 제2단계 확장사업과 관
련하여 관리자의 직렬을 변경하고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내용
임.

조정내용으로는

월평정수사업소장의 직급을 현행 지방기계사무관, 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에서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현재 월평정수장은 제2단계 사업이 확장 준공되어 본격적인 정상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업무량 증가에 따른 그 소요인력도 21명이나 증원된 상태임.

따라서 늘어난 업무량이나 타시도 및 관내 송촌정수장과의 균형유지 등을 고려할 때 금번 관리자의 직급상향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겠음.

의안검토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명 :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년 6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 학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5년 6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5. 5. 27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 5. 29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시민회관의 중요업무가 문화·예술등 각종 행사지원 기능으로 일반행정업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 업무를 겸하고있어 관장의 직렬을 업무성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시민회관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조정함.(안 제4조 제1항)

3. 검 토 의 건

본 안건은 대전시민회관의 중요업무가 문화·예술등 각종 행사지원 기능을 갖고 있어 일반행정업무와 비교할 때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관장의 직렬을 업무성격에 맞게 변경 조정하려는 내용임.

조정내용으로는

현 시민회관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임.

금번 시민회관장의 직렬 조정문제는 향상된 시민의 문화수준이나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공간의 질적 서비스면을 생각할 때 늘어나는 이용자의 욕구충족과 회관기능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회관 관리자의 직렬을 전문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봄.

그러나 시민회관의 업무성격상 운영관리 측면과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전문성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볼 때는 회관 고유업무의 비중면에서 직렬조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또한 인사관리면에서도 행정과 별정의 복수직화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에 묘를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시산하 사업소별 관리자 직급 및 직렬

기 관 명	관리자 직위 및 직렬	기 관 별	관리자 직위 및 직렬
시립연정국악원	3.4급상당 별정직	근로자종합복지관	지방행정사무관
한 발 도 서 관	지 방 서 기 관	여 성 회 관	지 방 서 기 관 4급상당 별정직
체육시설관리소	"	수질환경사업소	지방공업서기관 지방환경서기관
시 민 회 관	지방행정사무관	공 원 관 리 소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임업사무관
근 청 회 관	"	양묘관리사업소	지방임업사무관
위 생 처 리 장	"	화 장 장	5급상당 별정직
농수산물관리소	"		
차량등록사업소	"		

의 안 검 토 보 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출자계획안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년 6월 일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학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출자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995년 6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출자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5. 5. 19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 5. 25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 가. 한시조직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던 택지개발, 주택사
업을 '95년7월1일자로 한밭개발공사로 이관할 계획에 따라
- 나. 이와 관련된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
회의결을 얻어 한밭개발공사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가. 공영개발사업단의 택지개발과 주택사업관련 자산평가 결과
('94. 7. 20현재)
- 나. 출자가능액 1,042억중 수권자본금 390억원까지 1차로 292억원
을 출자하고 잔여분 750억은 조례 및 정관의 수권자본금을
1,500억원으로 개정 한후 2차로 출자
 - 한밭개발공사의 납입자본금(98억)4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2회로 분할하여 출자
- 다. 1차 출자는 현물로 하되 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내 근린생활
용지로 미분양된 48필지 292억을 우선 출자

3. 검토 의견

본안건은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이 금년 7월1일자로 한발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재산을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발개발공사로 출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 가능액은 총1,042억원으로써 이는 지난 '94년7월에 실시한 자산평가 결과에 따라 총 자산 2,029억원중 부채 98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음.

출자규모는 현재 한발개발공사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공사 수권자본금이 총390억원으로써 공영개발사업 출자가가능액 1,042억원중 시납입 자본금 98억원을 제외한 292억원을 1차로 우선 현물 출자하고 잔여분 750억원은 조례 및 정관을 한번 더 개정하여 수권자본금을 1,500억원으로 한 다음 2차로 출자하게 되겠음.

이러한 출자방법은 관련 상법 제437조의 규정에 의거 증자시 납입자본금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우선 292억원만 출자하는 것이라 하겠음.

다만 앞으로 조례개정이 한번 더 있어야만 공영개발사업 자산의 전액 출자가 완료되는데 그 개정 시기가 공사화로 전환되는 오는 7월1일 이후로 예상되는바 미출자분 750억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뒤따른다고 봄.

그러나 본 문제는 한발개발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금년 7월1일부터 관련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공사가 승계하기 때문에 전액출자 완료까지 그 관리는 시장과 공사간의 위탁협약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면 되겠고 향후 조례등 관계규정을 개정한 후 이를 마무리하면 되겠음.